

건설정책리뷰 2016-02

제20대 총선 정당별 건설산업 관련 공약 검토 및 시사점

홍성진 · 박선구

2016. 4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요 약

- 4년마다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공약은 각 정당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정책과 개발공약을 국정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향후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큼
- 본고에서는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각 정당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을 검토하고, 향후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음
- 각 정당의 지역별 건설산업 공약은 과거 선거 공약에 비해 이미 사업 검토 단계에 있거나 이전부터 논의된 공약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수도권 지역은 교통(지하철)·관광도시 중심, 경남권 지역은 교통(도로)·해양 도시 중심, 경북·강원권 지역은 교통·클러스터 조성 중심, 호남권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개발공약 중심, 충청권 지역은 교통 중심, 세종·제주권 지역은 부족한 기반시설 중심의 공약이 주를 이루었음
- 건설산업 정책 공약 중 건설공사 관련 공약은 리모델링, 건설정책 관련 공약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R&D 사업 제고가 공통적이며, 그 밖에 불공정 계약 근절,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 공공공사 발주자 직접시공제도 등이 있음
 - 리모델링은 법률 용어와 실제 공사에서의 개념적 차이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및 리모델링 관련 법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소송비용 부담, 제도 적용 범위의 협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R&D 사업 제고는 건설업체 활동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금융 지원, 보조금 지급, 세제지원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의 일환으로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대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해외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하여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의 기업회생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공익채권에 규정될 수 있도록 입법 개정이 필요함
 - 직접시공제도는 규제 완화의 측면 또는 발주자가 공사특성을 감안해 별도로 직접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 론	1
II. 각 정당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 검토	3
1. 건설산업 정책 공약	3
2. 지역별 건설산업 공약	20
III. 각 정당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의 시사점	29
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시사점	29
2. 공통적 공약에 대한 시사점	30
3. 각 정당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시사점	33
IV. 결 론	38
참고문헌	40

I. 서 론

- 선거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통치 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며, 통치권력 정당성의 기초임
 - 일반국민이 유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또는 법적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공직선거가 대표적임
- 이중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성은 매우 큼.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개별적인 헌법기관이자 개개인이 모두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임
 - 우리 헌법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권과 관련하여 현대 의회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어 국회의원의 정당 소속원으로서의 지위는 매우 크며¹⁾, 국회의원 선거 그 자체가 정당 소속원으로서의 지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²⁾
- 따라서 4년마다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각 정당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정책과 개발공약을 국정 운영과 연계하여 향후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 정당의 선거 공약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건설산업은 단일 산업 중 최대 규모이며, 전후방 연관효과가 커서 타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2000년대 중후반 이후 건설업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선거에서 제시된 건설산업 공약은 향후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큼

1) “오늘과 같은 정당 국가적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당 없이는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반해 개인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정치적인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헌법재판소 1989. 9. 8. 자 88헌가6 결정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254쪽

- 특히, 건설업은 수요독점 산업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규제와 시장개입이 많음. 따라서 정부 정책 변화와 방향에 따라 업황의 변동가능성이 큰 편임

□ 본 고는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각 정당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을 검토하고, 향후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각 정당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은 건설산업 정책 관련 공약과 지역별 공약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각 정당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 검토를 통하여 향후 건설공사 수주, 건설산업의 성장 분야 예측,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건설업계는 각 정당의 공약을 검토함으로써 자체적인 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으며, 각 정당의 공약 이행 여부 감시 및 공약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법 활동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분석대상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으로 하고, 분석자료는 각 정당의 정책 및 지역공약집을 중심으로 검토함³⁾

- 새누리당 ‘함께 누리는 미래로’ 정책 및 지역공약집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정책 및 지역공약집
- 국민의당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 정책공약집
- 정의당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책공약집

3)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과 지역공약집을 각각 별도로 발표하였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정책공약집에 한정하여 발표함

Ⅱ. 각 정당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 검토

1. 건설산업 정책 공약

- 각 정당의 건설산업 정책 공약은 건설공사 관련 공약과 건설정책 관련 공약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전반적으로 건설공사 관련 공약의 경우 “주거 안정 및 복지 관련 사업”, 건설정책 관련 공약의 경우 “하도급법” 개정이 공통적인 사항임
- 각 정당은 건설공사 관련 공약에 있어 리모델링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소규모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써, 향후 건설시장에 있어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
- 또한 건설정책 관련 공약은 건설하도급 공정 거래 질서 확립, 건설근로자의 권익 확대, 건설산업 육성 및 혁신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정당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건설하도급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 건설산업 육성 및 혁신을 위한 “R&D 사업 제고” 등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음

1) 새누리당

(1) 건설공사 관련 공약

- 새누리당의 건설공사 관련 공약의 경우 리모델링을 주된 기법으로 활용한 관광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주거안정 사업, 환경안전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 관광산업 관련 인프라는 창조경제와 연계된 산업간 융합(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을 통한 건설공사가 있음
 - 주거안정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특화단지, 어르신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급, 대학생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등이 있음

- 이 밖에 노후상수도 개량 사업과 같은 환경안전 사업이 있음

□ 건설 공사의 방법론은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인데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빈집 리모델링, 노후상수도 개량사업 등이 대표적임

① 관광·문화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 사업

□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k-pop 본 고장의 명성에 걸맞은 대형 k-pop 아레나 공연장 조성
- 전문공연장 마련
 - 장기적으로 대도시에 전문공연장을 확보하여 지방관광 활성화
- 임도를 활용하여 트래킹 코스와 산악자전거길 조성

□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 2020년까지 크루즈 전용부두 확충 및 국제여객터미널 4개소 개발

□ 공공체육시설 설치

- 국민체육센터 규모를 축소한 근린형 거점 체육시설 모델을 국민체육센터 비수혜 지역과 중·소도시 우선 지원

② 주거안정 사업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및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세대출입 방화문 개선, 승강기 안전장치 개선 등 안전관련 시설물 개선 사업 추진

□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화로 1~2인 가구 주거안정 사업

- 빈집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후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제공
 - 「도시 빈집 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지자체별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 활용사업 지원, 빈집 관리 정보체계 구축, 토지수용권 등 제도 마련
- 빈집을 철거 후 공공시설로 활용하거나, 기금 지원을 통해 수리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활용 사업 발굴
 - 매년 600호 수준의 정비사업 추진

□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및 저소득 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단지 조성

-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17년까지 최대 10개 조성
 - 2017년까지 행복주택 건설물량 중 신혼부부용 투룸을 대폭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자녀양육을 위한 편의시설도 함께 도입하는 등 신혼부부 지원을 강화
- 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지속 공급
 -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16~'17년 한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향후 정부 재정을 활용하여 지속 공급
 - 2016년~2017년 재정과 민간기부금을 공동 활용하여 공공실버주택 16개동 공급 ('16년 11개동 선정하여 추진 중)
 - 연간 800호 수준의 공공실버주택 지속 공급

□ 행복주택 지속공급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 등 젊은층 80%,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주거급여수급자 20%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행복주택 공급

□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 및 연합기숙사 건립 확대

- 기숙사 유해 실내환경 리모델링을 통한 학생 주거환경 개선
- 국·공유지 등을 기숙사 건립 부지로 활용하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건립 확대
 -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추진
 - 공공기금 또는 민간기부금, 국고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하여 건립비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
 - 건립비 전액 국고 지원시, 국립대 기숙사비 수준인 월 15만원(2인실 1인당)으로 공급 가능

③ 환경 안전 사업

□ 노후상수도 개량 사업

- '16년 시범사업(2개소 40억원)후, '17년부터 단계적 사업 추진
- 매설후 20년 이상 경과, 대형 공사장 인접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 ('15년) 90개 지자체 대상 약 9,582km 노후관로 조사 실시
 - ('16년) 49개 지자체 대상 약 7,000km 노후관로 조사 실시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2) 건설정책 관련 공약

- 새누리당의 건설정책 관련 공약은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발주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특징임
- 또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상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제시하고 있음
- 건설산업의 육성 및 혁신과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R&D 지원 사업의 신설 및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① 건설 하도급 공정 거래 확립

□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

-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계약법」적용 확대, 조달청 의무위탁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발주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자의적인 계약 집행소지가 없도록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 자산 1,000억원 이상이면서 예산 500억원 이상(65개) → 예산 250억원 이상(123개)
 -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
 - 공공기관에 대한 조달청 의무위탁대상 확대

② 건설근로자의 권익 확대

□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및 기초 고용질서 확립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처리
 - 근로기준법 : 부가금제(법원 판결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액 만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 지연이자제 확대(퇴직 + 재직근로자),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부여 등 추진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즉시 과태료 부과(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 2천만 이하 과태료)
-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확대 추진

③ 건설산업 육성 및 혁신

□ 2,000억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

- 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기업화 지원
 -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견기업 전용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도입
 - 우선 R&D 수요조사(2016년) → 예비타당성 조사(2017년) 등을 거쳐 2018년에 1,000억원 규모로 중견기업 전용 R&D 신설
 - 사업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2020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단계적 확대

□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강화

- 건설현장에서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토 방안 마련
- 건설 안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지자체 지원 강화

2) 더불어민주당

(1) 건설공사 관련 공약

□ 더불어민주당의 건설공사 관련 공약은 국토의 균형 발전 사업, 지속가능발전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사업, 주거 안정 및 복지 관련 사업, 대북 건설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국회의 세종시 이전 사업, 대북 건설 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이 특징임

- 국토의 균형 발전 사업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 사업’, ‘소규모 복합형 문화 공간 사업’, ‘지방 노후상수도시설 개선 사업’ 등이 있는데, 국회의 세종시 이전 사업의 경우 과거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판결⁴⁾과 연관이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됨
- 지속가능발전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사업은 고속철 산업 육성과 4대강 재자연화사업이 있음
- 주거 안정 및 복지 관련 사업은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경로당의 리모델링을 통한 노인 종합 복지센터 개편, 장애인 주거지원 사업이 있음
- 대북건설 사업은 개성공단 확대, 남북상생경제 3대 SOC사업 추진(대륙 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백두산·평양 관

4) 헌법재판소 2004. 10. 21. 자 2004헌마554 결정

광 추진과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등 대북 사업에 있어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건설 공사의 방법론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 사업, 대북 건설 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과 소규모 복합형 문화 공간 사업, 지방 노후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경로당의 리모델링을 통한 노인 종합 복지센터 개편과 같은 리모델링 또는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 있음

① 국토의 균형 발전 사업

□ 국회의 세종시 이전 사업

-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대 정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 추진
-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소규모 복합형 문화 공간 사업

- 면, 리 등 문화 소외지역의 유휴 공간 리모델링 사업 확대(폐교, 폐시설 활용/관광진흥기금의 용자 지원 추진)

□ 지방 노후상수도시설 개선 사업

-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

② 지속가능발전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사업

□ 고속철 산업 육성

- 송도(인천)-강릉간, 목포-부산간, 부산-강릉간 고속(화)철도 건설로 한반도 U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차기 정부에서 단계별 착공

□ 4대강 재자연화사업 추진

-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에서 녹조 상습발생 구간, 먹는 물 수질 악화구간, 수생태계 파괴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시범사업 대상 보를 선정하여 수문 개방 및 보 철거 시범사업 실시
- 금강유역권역에 '생태복원기술 클러스터' 조성

③ 주거 안정 및 복지 관련 사업

□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
- 향후 10년 동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85만호 확충하여 임대주택 재고량을 현재의 5.2%에서 13.0%로 확충
- 향후 10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5,600개로 확충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수용율을 현재 10.6%에서 30%로 제고

□ 경로당의 리모델링을 통한 노인 종합 복지센터 개편

- 경로당 내부공간을 쾌적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여가활동 지도 전문가 및 간호사, 평생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 등을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개조 사업 확대

④ 대북 건설 사업

□ 개성공단 확대

- 3통(통행, 통관, 통신) 문제 해결과 3만명 규모의 근로자 제1기숙사 건립
- 뷰티, 건강 분야 등의 외국기업 유치
- 2, 3단계 확대 추진

□ 남북상생경제 3대 SOC사업 추진

- 대륙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 북한 인프라 개선 사업

□ 백두산·평양 관광 추진과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2) 건설정책 관련 공약

- 더불어민주당의 건설정책 관련 공약은 하도급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교섭 등 책임부여 의무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주요 특징임
 - 하도급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하도급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

섭권·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교섭 등 책임 부여 의무화를 제시하고 있음

-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 밖에 근로자범위의 확대와 사업주 책임 강화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하여 하도급근로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원사업자(도급)사업주의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사람 모두를 「산업보건법」의 근로자 범위로 확대하고 있으며, 산재다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원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 다만, 건설 하도급 공정 거래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협·단체와의 정책적 연계 또는 정책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하도급법 개정 방향 및 이유로 “갑질 근절 방안 마련”,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 “성과공유제 확산 및 개선” 등의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① 건설 하도급 공정 거래 확립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공공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 2차 협력사 보호 강화 등 갑질 근절 방안 마련
-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
-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성과공유제의 확산 및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이익 극대화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비용전가나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 및 활동 강화
- 공정위의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② 건설근로자의 권익 확대

□ 하도급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 하도급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교섭 등 책임 부여 의무화

□ 근로자범위의 확대와 사업주 책임 강화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증대

- 하도급근로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원사업자(도급)사업주의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사람 모두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범위를 확대
- 산재다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원사업자의 책임 강화

③ 건설산업 육성 및 혁신

□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지역 수출기업 및 내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해외마케팅사업 지원 강화
- 대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국민의당

(1) 건설공사 관련 공약

□ 국민의당의 건설 공사 관련 공약은 생활 밀착형 복지 관련 건설사업과 청년희망임대주택과 같은 주거안정 사업이 특징임

- 국공립 보육시설,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같은 복지 관련 건설사업은 그 성격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정책 공약 자료에 명시하고 있음
- 청년희망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함

- 건설 공사의 방법론은 리모델링을 주된 기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홀몸 어르신 경로당 쉼어 하우스가 대표적임

① 복지 관련 사업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주민자치센터 1개소 당 1개 보육시설을 원칙으로 확충(2016년 하반기 개정안 발의, 2017년 입법 완료)
-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 전체 노인장기요양시설 중 공공시설의 부족(2.2%)으로 서비스의 질 관리에 한계가 발생하여, 공공요양시설을 이용하려는 대기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직영 요양시설 및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기반 공공 요양시설)을 확대함(2016년 하반기 개정안 발의, 2017년 입법 완료)
-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 홀몸 어르신 경로당 쉼어 하우스 :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홀몸 노인'이 약 137만9000명이며 이중 약 60만명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 악화에 경제난까지 겪는 도움이 필요한 홀몸어르신들임. 전국에 운영 중인 3만 6000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조리시설, 건강의료기, 잠자리 등을 마련하여 공동숙소로 탈바꿈하고,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2016년 하반기 개정안 발의, 2017년 입법 완료)

② 주거안정 사업

-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을 통하여 만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임대주택 공급(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

(2) 건설정책 관련 공약

- 국민의당의 건설정책 관련 공약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원사업

자 법정관리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 국가 R&D 예산 중 중소기업에 배정되는 비율 확대 등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제도 개선이 특징임

- 하도급법 개정을 통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시 납품단가 연동, 부당한 특약의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사업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함
- 국가 R&D 예산 중 중소기업에 배정되는 비율을 13.7%(2014년)에서 20%로 확대
- 이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이익공유제 도입 등이 있음

① 건설 하도급 공정 거래 확립(16년 하반기 개정안 발의, 17년 입법 완료)

□ 납품단가 연동제

-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납품단가에 연동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도록 함

□ 이익공유제 도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기업 이익을 협력업체와 배분하여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도입기업 세제혜택 제공

□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범위 확대

- 「하도급법」상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 및 의무고발요청제도를 개선하여 피해자가 타 조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함
-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입찰 종료 후 예정가격과 최저가 입찰가격을 즉시 공개

② 건설근로자의 권익 확대(16년 하반기 개정안 발의, 17년 입법 완료)

□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사업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함(2016년 하반기 개정안 발의, 2017년 입법 완료)

③ 건설산업 육성 및 혁신

□ 국가특허 및 대기업 기술 활용 제고

- 국가 R&D 예산 중 중소기업에 배정되는 비율을 13.7%(2014년)에서 20%로 확대하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가 연구비를 지원한 특허를 중소기업이 이용할 경우, 상업화 후 이익 발생 단계에서 특허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함(미국의 Bayh-Dole 법 벤치마킹)
-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기술을 활용하도록 핀란드 기술청의 '노키아 테크노폴리스 이노베이션 밀'을 한국형으로 도입하여 우수 기술 및 인력의 활용도를 높임(2016년 하반기 개정안 발의, 2017년 입법 완료)

□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IT산업이 성장한계에 봉착하였으며, 미래형 신성장산업의 발굴이 요구되는 상황임
-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과 융합의 산업기반을 구축함
- ICT와 생명과학, 에너지, 신소재산업 등 미래형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집중투자, 국가 R&D 투자조정을 통한 혁신과 융합기술 개발 기반 구축, 신성장산업센터 설립, 자금조성 및 벤처 투자환경 개선(장기적 계획 수립 및 2020년까지 집중 추진)

4) 정의당

(1) 건설공사 관련 공약

- 정의당의 건설 공사 관련 공약은 타 정당에 비해 많지 않으며, 서민 주거안정과 보육시설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반값임대 공정주택 공급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고를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제시하고 있음

① 반값임대 공정주택 공급

□ OECD 평균 공공주택 12% 확충을 위한 반값임대 공공주택 공급

- 토지비는 서울 수서공영주차장 부지, 혁신파크 부지의 평균치(1,200만원)에 용적률(500%)을 적용한 값으로 250만원임
- 건축비는 실제도급가액과 공정임금 지급을 전제로 하여 평당 450만원
- 분납(임대)은 입주시 주택가격의 30%, 입주 후 4년 또는 8년차에 40%를 납부하고, 10년차에 30%만 분양전환시 감정가격 기준으로 납부함
- 금리는 3% 기준
- 전세가는 월세 기준 전환율 4%

□ 반값임대 공정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급, 용적률 완화, 공공주택 사업 국민연기금 참여 확대 등의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관련법을 개정함

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비중 및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국고지원 늘리고,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445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리모델링, 민간매입,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공원 활용, 공공기관 시설 활용 등으로 20-30억에 달하는 부지매입 및 신축에 따른 비용 절감

(2) 건설정책 관련 공약

□ 정의당의 건설정책 공약은 타 정당에 비해 그 종류와 내용이 다양함. 특히, 건설하도급 공정거래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 임금 향상을 위한 임금제도 제시가 특징적임

- 주택관련 정책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의무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기준 강화 등을 제시됨
- 또한 현재 50억 미만 공사에 한해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시공제를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최소 75% 직접시공 의무화를 제시함.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 직접시공률이 높은 업체에게 수주 등의 우선

권을 부여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밖에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철회와 조속한 재가동 추진 등의 남북 경협 등 교류협력의 부활 및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으며,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4대강 복원 특별법」 제정, 하천 주변 난개발을 초래하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물기본법 제정으로 통합적·체계적 물관리체계 구축, 난개발 방지를 통한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노후하고 기능을 잃은 방치된 댐의 철거 등을 공약함

① 건설 하도급 공정 거래 확립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및 손해배상 한도 증액

- 하도급법, 대리점법 외에 가맹점법, 대규모유통거래법 등에도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대상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로 확대
- 하도급계약 정보공개 및 대기업의 공공입찰시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현황 및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 입증 요구

불공정 행위 공익적 시민단체 고발권 부여 및 집단소송제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 당사자나 공익적 시민단체에도 고발권 부여
- 소비자 권리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②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대기업이 누리고 있는 초과이익은 불공정거래에 연유하거나 비용절감 등을 위한 협력기업의 공동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은 원가절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목표를 달성할 경우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은 미미
- 이에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원청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함께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
-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 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

③ 건설근로자의 임금 향상

□ 공정임금제 도입

- 선진국에서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임금보호제도를 운용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유럽의 공정임금제(Fair wage) 등이 있음. 법정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공정임금제도를 도입
- 건설노동자가 없는 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 조사결정 권한에 문제를 지적하고 건설근로자의 직접신고를 통해 실패파악을 주장
- 단기적으로 공공사업장의 건설근로자 법정임금 보장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국가계약법 등의 개정으로 처벌조항을 신설
- 중장기적으로 유럽식 공정임금제 도입

④ 주택건설 정책 개선

□ 분양가 상한제 민간까지 확대

-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까지 확대 시행하여 민간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을 방지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적정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주택법 개정)

□ 분양원가 상시공개로 투명성 강화

-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원하도급 대비표 등 분양원가 상세 공개
- 사업주(공기업)가 예정가격 산출을 위해 작성한 설계내역, 건설사와 계약한 원도급내역,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와 계약한 하도급내역 등을 인터넷에 상시공개 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양원가를 제공

□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기준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 현행 준공된 지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50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방지
-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구조안전성에 대한 평가비중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비용분석 자료도 현행 10%에서 20%로 강화하여 철거가 아닌 유지관리를 통해 주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 조합 설립 동의요건 역시 4/5로 강화
-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남발하고 유명무실한 개발이익 환수장치에 따라 불투명한 사업추진이 많아짐
- 이에 개발부담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율을 현행 20~25%에서 50%로 확대

□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 건설업계는 후분양제 이행에 따른 건설사의 공급 축소, 금융비용의 소비자 전가, 중소건설사 부실화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음
- 그러나 오히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수반되면서 수요에 맞는 적절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며, 품질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건설사에게 유리함

□ 감리비 예치제 도입

- 94년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건축물 붕괴 사고 이후 주택감리제, 책임감리제 등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부실시공, 하자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감리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사업자가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감리대가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지방정부)에게 예치하도록 하여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리 관련 자료에 대한 공공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

⑤ 공공사업 직접시공제 의무화

□ 직접시공제 확대로 일자리 질 개선

- 50억 미만 공사에 한해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시공제를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최소 75% 직접시공을 의무화
-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 직접시공률이 높은 업체에게 수주 등의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 직접시공제는 불법다단계 하청을 거치면서 시장단가보다 줄어든 공사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

⑥ 남북경협 등 교류협력의 재개 및 활성화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철회와 조속한 재가동 추진

- 특별법 제정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

□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관광 재개

□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등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한국경제 활력 제고 및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⑦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시스템 구축

□ 「4대강 복원 특별법」제정

-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수해예방, 수질개선, 수자원확보 등을 목적으로 총 22조 이상을 투자한 대형 국책사업이나, 부실한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해 대형 보의 안전성문제,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건설공사의 비리담합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과 효과를 검토하여 인공구조물의 해체, 4대강 및 하천습지 복원 여부를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4대강 복원위원회'설치

□ 하천 주변 난개발을 초래하는「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폐지

- 현재 4대강 사업은 친수구역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에 있음. 따라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로 사업타당성 재검토에 따라 사업을 변경 또는 폐지

□ 물기본법 제정으로 통합적·체계적 물관리체계 구축

- 물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수와 치수,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통합적으로 종합적인 물관리 시스템 구축

□ 난개발 방지를 통한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 산악관광특별법, 해안관광특별법 등 관련법률 제·개정 저지를 통한 보호지역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검토,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등 실시

□ 노후하고 기능을 잃은 방치된 댐의 철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등을 개정해 댐의 철거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대책 마련

2. 지역별 건설산업 공약

- 이번 20대 총선에서 지역별 공약을 제시한 정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⁵⁾.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정책공약만 제시하고 지역개발 공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음
- 이번에 제시된 지역개발 공약은 과거 선거공약에 비해 이미 사업 검토 단계에 있거나,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공약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1) 수도권 지역

- 서울의 개발공약은 크게 광역철도 확충, 관광도시 구축, 상습침수지역 해소,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확충, 초중고 노후시설 개보수 등임
 - 서울의 지하철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철도 확충이 제시됨. 광역철도와 지하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부광역철도(부천 원종~홍대입구)신설과 신분당선 서북부 구간(동빙고~삼송) 연장을 추진함
 - 서울을 2천만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관광인프라 개선 역시 제시됨
 -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광화문, 강남역, 사당역 등에 대심도 빗물저류배수터널 건설을 추진함
 - 또한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서울지역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를 확충하고 초중고 노후시설의 전면 개보수를 공약으로 제시함
- 인천지역의 개발공약은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원도심 재생산업 추진, 미래교통체계 구축, 도시철도 확장 및 연안여객 준공영제 도입, 산업단지 재정비, 루원시티 인천시교육청 유치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섬, 갯벌, 해양 등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카페리 등의 관광상품 개발을 제시함
 - 경제자유구역 등 인천의 신도시 건설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이 큰 원도심에 대해 인천역 복합개발 등의 재생사업을 추진함

5)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공약 중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이후 표에서 제시한 지역별 공약에서는 별도로 각 당의 공약을 표시하지 않음

-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확장과 경인고속도로 개선, 공항과 항만의 교통연계 정책 등을 제시함
 - 이밖에도 공단,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인천의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함. 또한 인천교육청의 루원시티 이전 등을 공약함
- 경기지역 개발 공약은 경기북부 개발, GTX 등 광역급행철도 개통, 국제테마파크 조성, 경기만 마리나 개발, 임대주택 확대 등이 대표적임
- 군사, 안보 등의 이유로 그간 개발이 부진했던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제시함
 - 수도권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광역급행철도(GTX)⁶⁾ 개통 및 KTX 경기도 내 정차역 신설을 추진함
 - 관광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성시에 국제테마파크 조성
 - 해양레저 수요 충족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산시에 마리나 개발을 추가적으로 계획함
 - 이밖에도 경기도의 인구 유입 증가에 따라 임대주택의 확대를 약속함

<표-1> 수도권 공약

서울	인천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철도 확충 · 2천만 관광도시 구축 · 상습침수지역 해소 ·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확충 · 초중고 노후시설 개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 원도심 재생산업 추진 · 미래교통체계 구축 - 도시철도 확장 등 · 산업단지 재정비 · 루원시티 인천시교육청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북부 개발 · GTX 등 광역급행철도 개통 · 국제테마파크 조성 · 경기만 마리나 성공적 개발 · 임대주택 2배이상 확대

2) 경남권 지역

- 부산의 개발공약은 크게 대심도 지하도로망 구축,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글로벌 금융허브 설치, 동아시아 물류 중심도시 지원, 남북경제협력 지원센터 건립, 실버산업 육성, 해양 ICT융합산업도시 조성 등임
- 부산지역의 교통혼잡비용 감소와 관광, 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만덕~센텀 간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을 제시함

6) 3개노선(A노선: 삼성~동탄, B노선: 송도~청량리, C노선: 의정부~금정)

- 북항재개발, GDB특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권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해양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함
 - 해양플랜트, 선박금융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는 등 금융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제시함
 - 선박전자 IT융합센터 건립 및 동아시아 물류 중심도시 지원을 제시함
 - 실버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이끌 ‘항노화산업연구원’의 설립과 시니어제품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함
 - 이밖에도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윈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센터 건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
- 울산지역의 개발공약은 신성장동력벨트 조성, 남북·동서·순환축 및 동남권 교통인프라 구축, 산악·해양·산업도시 조성, 울산항 오일허브 육성,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울산의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ICT 융합 및 고도화사업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남구 테크노산업단지와 중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산학연 클러스터 등을 조성함
 -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곽순환고속도로, 울산항 배후도로, 울산고속도로와 국도7호선 확장을 제시함
 - 울산은 산악관광자원(신불산, 간월산)과 세계 최대 산업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산악권, 해안권, 산업권의 관광상품화를 추진함
 - 이밖에도 울산항을 동북아 오일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도 공약으로 제시됨
- 경남지역 개발 공약은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항노화바이오 산업단지 구축, 글로벌 관광경남 구축,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창원국가산업단지 고도화, 지역대표 박물관 건립 등이 대표적임
-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항공산업(사천, 진주), 나노융합(밀양), 해양플랜트(거제) 등 3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개발을 추진함
 - 거창, 함양, 산청 등에 미래 각광산업인 항노화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함
 - 남해안 관광인프라 확대를 위해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마산 로봇랜드, 거제 관광단지 조성 등을 추진함

-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를 조기 추진함
- 이밖에도 창원외의 국가산업단지 고도화를 추진하고 지역별 박물관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함

<표-2> 경남권 공약

부산	울산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심도 지하도로망 구축 ·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 글로벌 금융허브 설치 · 해양 ICT융합산업도시 조성 · 동아시아 물류 중심도시 지원 · 남북경제협력지원센터 건립 · 실버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벨트 조성 · 남북,동서,순환축 및 동남권 교통인프라 구축 · 산악,해양,산업도시 조성 · 울산항 오일허브 육성 ·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 항노화바이오산업단지 구축 · 글로벌 관광경남 구축 ·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 창원국가산업단지 고도화 · 지역대표 박물관 건립

3) 경북·강원권 공약

- 대구의 개발공약은 광역교통망 구축, 문화·예술분야 지원, 한류콘텐츠 플렉스파크 조성, 드론 클러스터 조성, 대구 취수원 이전, 구암동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K-2 공군기지 이전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대구광역권 산업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등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확충을 제시함
 - 한류콘텐츠 플렉스파크 조성 등 문화와 예술분야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제시함
 - 드론 클러스터 구축,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실증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
 - 이밖에도 과거부터 추진되었던 대구 취수원의 상류 이전, K-2 공군기지 이전, 구암동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
- 경북지역의 개발공약은 스마트 융복합산업 육성, 환동해 과학산업벨리 조성, 田자형 국가광역교통망 건설, 역사문화융성 플랜 추진, 동해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이 있음
 - 경북지역의 권역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탄타늄, 스마트기기, 바이오·백신, 항공부품 등 4대 스마트 융복합 신산업의

- 육성을 제시함
 - 환동해 과학신산업 벨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함. 이를 통해 동북아 해양관광 벨리 및 글로벌 과학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함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권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함. 세부적으로 세종시와 경북도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영덕과 삼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중부내륙철도(수도권~문경, 대구) 건설 등을 제시함
 - 이밖에도 신라왕경 유적 복원, 한국정신문화의 수도(경북 역사자료관, 종가문화진흥원) 프로젝트 등을 활용하여 경북이 보유한 다양한 전통 문화 자산을 지속가능하게 문화 관광상품으로 이어감
- 강원지역 개발 공약은 올림픽 문화유산 사후관리 및 관광벨트 조성, 동해북부선 추진, 제2경춘국도 신설, 동해고속철도 조기건설, 보훈요양원 건립, 과학기술원 설립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이 있음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추진해 강원도의 문화적 가치를 각인시키고, 향후 올림픽 문화유산화로 배후도시 조성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원을 통해 관광인프라 구축을 추진함
 - 강릉~제진, 삼척~강릉 등 국가철도망 구축과 제2경춘국도 신설 등의 개발계획을 제시함
 - 이밖에도 원주 혁신도시 내에 보훈요양원 건립, 과학기술원 설립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추진함. 또한 강원도의 산지, 해안의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추진함

<표-3> 경북·강원권 공약

대구	경북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통망 구축 · 문화, 예술분야 집중지원 · 한류콘텐츠 플렉스파크 조성 · 드론클러스터 조성 · 대구 취수원 이전 · 구암동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 K-2 공군기지 이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융복합산업 육성 · 환동해 과학산업벨리 조성 · 田자형 국가광역교통망 건설 · 역사문화융성 플랜 추진 · 동해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전기차생산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문화유산 사후관리 및 관광벨트 조성 · 동해북부선 추진 · 제2경춘국도 신설 · 동해고속철도 조기건설 · 보훈요양원 건립 · 과학기술원 설립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 · 산지규제 완화

4) 호남권 공약

- 광주의 개발공약은 크게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및 국가산업단지 건설, 광주역 및 광주송정역 일대 역세권 개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민주, 인권, 평화 단지 조성 등이 있음
 - 자동차 전용 국가 산업단지 조성 및 친환경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자동차 1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계획함
 -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광주송정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제시함
 - 이밖에도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민주, 인권, 평화 콤플렉스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함

- 전북지역의 개발공약은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메가 탄소 밸리 조성 추진, 전북금융타운 조성, 미생물, 종자, 식품으로 이어진 식품생명산업 활성화,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새만금을 대중교역의 전초기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새만금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무규제특구 조성을 추진함
 - 탄소밸리 생태계 완성을 위한 메가 탄소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전북과 경북에 공동으로 1조원대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함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연기금으로 특화된 국내 최대 금융허브 건설을 추진함
 - 이밖에도 전북의 종자, 식품, 첨단농산업기술 등에 대해 집중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또한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함

- 전남지역 개발 공약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부속병원 유치, 대규모 수출원예단지 조성, 목포 원도심 재생사업 및 내항 개발, 도립 직업훈련원 건립, 섬관광 자원화 지원, 애완동물, 곤충산업 집중육성 등이 대표적임
 -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학병원이 없는 상황으로 향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부속병원 유치를 제시함
 -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규모 수출원예단지를 조성하여 저비용, 고품질의 수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함

- 낙후된 목포지역의 원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서남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중심 허브항으로 목포 내항을 개발함
- 해양레저 수요 충족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산시에 마리나 개발을 추가적으로 계획함
- 전국 65%의 섬이 전남에 분포함을 감안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 소 도서지역 연안 여객선 접안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남의 시책인 ‘가고 싶은 섬’ 프로젝트 지원을 제시함
- 이밖에도 애완동물,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지원을 늘리고, 양질의 인력양성을 위해 도립 직업훈련원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함

<표-4> 호남권 공약

광주	전북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및 국가산업단지 건설 · 광주역 및 광주송정역 일대 역세권 개발 ·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 민주,인권,평화 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 메가 탄소밸리 조성 추진 · 전북금융타운 조성 · 미생물,종자,식품으로 이어진 식품생명산업 활성화 ·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부속 병원 유치 · 대규모 수출원예단지 조성 · 목포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 목포 내항 개발 · 섬관광 자원화 지원 · 애완동물,곤충산업 집중육성 · 도립 직업훈련원 건립

5) 충청권 공약

□ 대전의 개발공약은 크게 도청이전부지 복합단지 조성, 서대전역 KTX증편,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회덕IC신설, 대덕특구 첨단복합 허브 추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대전의료원 건립추진 등이 있음

- 충남도청 이전 후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부지의 조속한 국비매입을 추진하여 교육, 연구개발 등의 복합공간 조성을 계획함
- 호남고속철도 전용선 개통 이후 서대전역 주변상권 위축 및 이용객 불편이 증가하여 서대전역 KTX 증편을 제시함
- 도시철도 2호선 진행이 사업 장기화로 인해 주민불편 및 지역발전 불균형을 초래하여 도안신도시구간 조기 착공을 추진함
- 회덕IC 신설 및 연계사업을 추진해 대덕구와 유성구의 교통여건을 개선
- 이밖에도 대덕특구 첨단복합 허브를 추진하고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을 추진함. 또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와 대전의료원 건립 추진 역시 공약으로 제시됨

□ 충북지역의 개발공약은 중부고속도로 확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중부내륙선철도 완공, 동서5축 고속도로 추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충주댐공업용수도 조기 공급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서울, 세종으로 이동하는 교통량의 분산처리 및 남이JCT 병목현상 해소, 원활한 교통 및 물류지원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의 확장을 추진함
- 충청, 호남권과 강원권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세종~충북~강원권) 건설을 제시함. 또한 세종~청주공항~괴산~안동 간의 고속도로 역시 추진함
- 충북선, 경부선, 중앙선과 연계하여 운송효율 증대 및 철도서비스 향상과 중부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선 철도(이천~충주~문경) 건설을 계획함
- 이밖에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충주댐 공업용수도 조기 공급 등도 공약으로 제시됨

□ 충남지역 개발 공약은 대산-당진고속도로 확장, 당진-천안고속도로 건설,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문화, 관광을 위한 재정 투자 등이 대표적임

- 서해권 경제 거점인 대산항 물동량 급증에 따라 서산시 대산읍에서 당진 분기점까지 고속도로 구간의 확장을 계획함
- 천안·아산~청원·청주권 간 교류 확대를 수도권 과밀화 해결을 위해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함
-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을 추진함. 이는 서해선, 호남선, 전라선, 수도권 전철과 연계 운행하여 여객 및 물동량 수송의 효율성이 증진됨
- 서해안 지역 주요시설 및 항만의 화물, 여객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여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을 계획함
- 이밖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지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재정 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함

<표-5 > 충청권 공약

대전	충북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이전부지 복합단지 조성 · 서대전역 KTX증편 · 도서철도 2호선 조기착공 · 회덕IC신설 · 대덕특구 첨단복합 허브 추진 ·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 대전의료원 건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고속도로 확장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 중부내륙선철도 완공 · 동서5축 고속도로 추진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 충주담공업용수도 조기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당진고속도로 확장 · 당진-천안고속도로 건설 ·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 ·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 문화,관광 위한 재정 투자

6) 세종 · 제주권 공약

- 세종의 개발공약은 KTX세종역 신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문화도시(세종대왕 한글단지) 조성 등이 있음
 - 중앙행정기관 이전 마무리로 실질적인 행정도시 도약에 따라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추진함
 - 이밖에도 상권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위해 KTX세종역 신설을 추진함. 또한 선진국형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세종대왕 한글문화 단지 조성 등을 공약함

- 제주의 개발공약은 제2공항 조기건설, 제주관광 차세대 도약기반 조성, 평화공원 4단계 사업 추진, 에코 창조산업 육성 등이 있음
 -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국제공항의 항공수요 충족을 위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계획함
 - 최근 증가하고 있는 크루즈 입항수요에 대한 접안시설 부족에 따라 제주 신항을 개발하여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과 도약을 추진함
 - 전기차 · 스마트그리드 ·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코창조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탄소 없는 제주 조성을 추진함
 - 이밖에도 제주 평화공원 4단계 사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

<표-6> 세종 · 제주권 공약

세종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이전 마무리로 행정기능 강화 · KTX세종역 신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 · 선진국형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 문화도시(세종대왕 한글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공항 조기건설 · 제주관광 차세대 도약기반 조성 · 평화공원 4단계 사업 추진 · 에코 창조산업 육성

Ⅲ. 각 정당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의 시사점

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시사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총 300 의석수(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의 당선 결과가 나타남⁷⁾
- 제20대 국회는 2016년 5월 30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고, 같은 해 5.31~6.1 임시회 집회 요구, 6. 6 제1차 본회의를 통한 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9.1 정기회 개최 등의 일정이 개시됨
 - 국회는 법률의 제·개정, 입법권, 예·결산 심의에 관한 재정권, 인사청문회·국정감사·국정조사 등의 국정통제권한을 갖게 됨
-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한 후에 가부투표를 하는 본회의 결정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⁸⁾, 건설산업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7) <표-7> 20대 총선 정당별 당선현황

시도명	당선인수	정당별 당선인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합계	300	122	123	38	6	11
서울특별시	49	12	35	2	0	0
부산광역시	18	12	5	0	0	1
대구광역시	12	8	1	0	0	3
인천광역시	13	4	7	0	0	2
광주광역시	8	0	0	8	0	0
대전광역시	7	3	4	0	0	0
울산광역시	6	3	0	0	0	3
세종특별자치시	1	0	0	0	0	1
경기도	60	19	40	0	1	0
강원도	8	6	1	0	0	1
충청북도	8	5	3	0	0	0
충청남도	11	6	5	0	0	0
전라북도	10	1	2	7	0	0
전라남도	10	1	1	8	0	0
경상북도	13	13	0	0	0	0
경상남도	16	12	3	0	1	0
제주특별자치도	3	0	3	0	0	0
비례대표	47	17	13	13	4	0

8) 성낙인, 전계서, 430쪽.

- 제20대 국회의 입법, 재정, 국정통제의 방향을 일의적으로 정의할 순 없으나, 각 정당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의 주요 특징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새누리당은 중앙당 차원에서의 관광·문화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사업 등의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건설공사 발주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건설공사 관련 공약 외에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확립, 초과이익공유제, 건설근로자의 권익 확대 등의 건설 정책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제20대 국회에서는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확립, 초과이익공유제, 건설근로자의 권익 확대 등 건설산업에서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많은 의견수렴 및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2. 공통적 공약에 대한 시사점

- 본 연구는 각 정당의 건설공사 관련 공약과 건설정책 관련 공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건설공사 관련 공약은 정부의 정책 집행과 연계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건설정책 관련 몇 가지 제도의 내용 및 논의 방향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되, 각 정당이 제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관련 공약의 방향성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 및 방향성을 제시함

1) 리모델링 사업

-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함(「건축법」 제2조)
 -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함
- 리모델링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를 하는 자 즉,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함
 -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함
- 각 정당은 건설공사 관련 공약으로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빈집 리모델링, 경로당의 리모델링을 통한 노인 종합 복지센터 개편,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리모델링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렇듯 향후 건설산업 정책은 유지·보수시장인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건설업계는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각 정당은 향후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약의 주요 대상, 기간, 비용, 전문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는 그 성격에 따라 대수선 또는 증축행위에 해당 하는 종합공사와 대수선 또는 증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전문공사로 구분되고, 법령상 “리모델링”의 개념과 실제 공사에서의 “리모델링”의 개념적 차이가 존재하여 발주자 및 건설업자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건설업자간의 업무 영역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하여 업역 분쟁 등 많은 문제가 있음
- 이를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설물의 리모델링 관련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징벌적 손해배상제이란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손해배상으로 코몬로 (common law)상 인정되고 있는 구제방법을 말함⁹⁾
-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법체계 및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민사법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입법체계의 정합성 여부를 중심으로 영미법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음
- 그럼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의한 동반성장의 여건 조성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하여 최초로 2011. 3. 29 “하도급법” 제35조에 도입되었고, 2013. 5. 28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4조) 등에 그 범위가 확대되었음
- 다만 현재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관련 적용 사례가 전혀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소송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에 대한 우려, 제도 적용 범위의 협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됨
- 따라서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R&D 사업 제고

- 연구개발투자는 신기술 확보로 생산성 제고는 물론 가격경쟁 위주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임
- 제도적으로도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금융지원, 보조금지급, 세제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9) 서울동부지방법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

- 건설업체는 연구개발투자의 필요성과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투자가 미흡한 상황임
 - 건설업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매출액 대비 0.4%로 전체 산업 2.4%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또한 2014년 기준 정부 R&D예산 17.7조원 중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약 4,100억원으로 2%에 불과한 상황임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예산 역시 국토교통부는 0.2%로 매우 낮은 수준임. 건설업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8.9%이며, 종사자 규모로도 55.9%임을 감안하면 향후 중소건설업체의 지원이 필요함
 - 중소 건설업체에 R&D지원 확대는 생산성, 기술개발 등으로 이어져 중소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 개별 업체별로 연구소 및 연구인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건설업체 활동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각 정당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시사점

1) 새누리당

-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
 -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적용을 확대, 조달청 의무위탁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발주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자의적인 계약 집행소지가 없도록 “국가계약법”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자산 1,000억원 이상이면서 예산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65개)에서 예산 250억원 이상(123개)으로 확대

- 한편, 발주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09년 “국가계약법령” 상 ‘주계약자 관리방식’ 을 도입한 상태
 -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1999년 “건설산업기본법령” , 2005년 “지방계약법령” 에 먼저 도입되었음
-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함
 - 이 경우에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됨
- 주계약자 관리 방식은 계약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공사품질 제고, 입찰환경 개선, 하도급 폐단 해결, 기술경쟁 유도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큼¹⁰⁾
- 그런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대한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이해부족, 이해관계인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경우 전체 공공 공사의 약 2~3%에 불과하며, 국가 발주 공사의 경우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따라서 발주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의무위탁 대상 확대 외에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더불어민주당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되면서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역시 활발히 진행됨

10) 박광배·김혜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방안」(Ⅲ), 연구보고서 2011-1,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1, 51쪽 이하

- 그러나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수주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2015년 기준 전체 해외수주에서 중소기업체는 8.4%에 불과함
 - 현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개척자금, 보증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지원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또한 해외건설협회에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졌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3) 국민의당

-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서는 기업회생시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및 생활 안정화를 위해 미지급된 채무자(법정관리 신청 수급인)의 근로자 전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토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건설근로자 중에서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못하고 있음
 - 이 경우 장기간(약 10년 이내)에 걸쳐 분할상환 받게 됨
- 1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1개사가 부도날 경우 평균 202개의 하도급업체에 1,230억 원의 피해규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부실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 하도급업체로 전가됨
 - 법정관리 등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저소득계층이 많은 건설근로자는 그 생존권을 위협받게 됨

- 이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임금 압류 금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원사업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의 개정을 통하여 원사업자의 기업회생시 건설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공익채권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4) 정의당

- 주택수명 연장을 위한 정책

- 정의당은 주거정책으로써 서민주거안정, 땅값·집값 거품제거, 주택수명 연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택수명연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중 공공사업 직접시공제 의무화를 제시하고 있음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반값임대 공정주택, 전월세 상한제 등이 있고, 땅값·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제도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이 있으며, 주택수명 연장을 위한 제도로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감리비 예치제 도입, 공공사업 직접시공제 의무화 등이 있음

-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금액 중 일정비율 이상은 하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서는 50억 미만의 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의당은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직접시공제도는 무자격부실업체 및 페이퍼컴퍼니의 퇴출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분업화·전문화된 우리나라의 건설생산체계의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고,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가 발생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음

- 직접시공이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하며, 직영시공과도 같은 의미로 쓰임
 - 직접시공의 주체는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이며, 원도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모두 해당됨¹¹⁾
-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체와는 달리 전문건설업체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이기 때문에 2014년 기준 원도급 29.5%, 하도급 70.5%의 비율로 공사를 수행함¹²⁾
- 만약 모든 공공공사에 있어 직접시공제도를 의무화할 경우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며, 분업화·전문화된 우리나라 건설생산체계의 근간을 무너트리게 됨
- 따라서 직접시공제도는 규제 완화의 측면 또는 발주자가 공사특성을 감안해 별도로 직접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주택수명 연장’ 과 부합하는 다른 제도적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11) 유일환,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가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건설정책리뷰 2012-10,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2, 3쪽

12)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통계연보」, 2014, 15쪽

IV. 결 론

-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개최되었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각 정당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개발과 정책 공약을 향후 국정 운영과 연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그 내용 및 시사점을 검토하였음
- 각 정당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은 지역별 건설산업 공약과 건설산업 정책 공약으로 구분하고, 건설산업 정책 공약은 다시 건설공사 관련 공약과 건설정책 관련 공약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각 정당의 지역별 건설산업 공약은 과거 선거 공약에 비해 이미 사업 검토 단계에 있거나 이전부터 논의된 공약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건설산업 정책 공약 가운데 건설공사 관련 공약은 리모델링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향후 건설시장에 있어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
 - 리모델링은 법률 용어와 실제 공사에서의 개념적 차이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및 리모델링 관련 법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건설산업 정책 공약 가운데 건설정책 관련 공약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R&D 사업 제고가 공통적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소송비용 부담, 제도 적용 범위의 협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R&D 사업 제고는 건설업체 활동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 세제지원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그 밖에 새누리당의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 더불어민주당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민의당의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 정의당의 공공공사 발주자 직접시공제도가 있음

-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의 일환으로 주계약자 관리 방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대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해외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하여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의 기업회생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공익채권에 규정될 수 있도록 입법 개정이 필요함
- 직접시공제도는 규제 완화의 측면 또는 발주자가 공사특성을 감안해 별도로 직접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홍성진, 선임연구원 (hongsj@ricon.re.kr)
- 박선구, 책임연구원 (parksungu@ricon.re.kr)

참 고 문 헌

1.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통계연보」, 2014
2. 박광배·김혜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방안」(Ⅲ), 연구보고서 2011-1,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1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254쪽
4. 유일한,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가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건설정책리뷰 2012-10,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2
5. 정당별 정책 및 지역공약집(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당별 건설산업 관련 공약 검토 및 시사점

2016년 4월 29일 인쇄

2016년 4월 29일 발행

발행인 신홍균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I S B N 979-11-5953-007-4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6

